

위기 청년 자립 '원스톱 지원' 맞손

전주시 덕진지역자활센터-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 덕진지역자활센터가 지역 내 위기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복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와 손을 맞잡았다.

덕진지역자활센터와 청년미래센터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에서 '위기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 복지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 청년 발굴 및 사례 공유 △맞춤형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정서·심리 회복 프로그램 연계 △취업·창업 및 자립 지원 협력 △지역사회 지원 연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청년 개별 상황에 맞춘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해 단계별 자립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자립사업단 내 청년 사업단을 중심으로 청년 맞춤형 자활



전주시 덕진지역자활센터와 청년미래센터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에서 '위기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 복지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단순 참여를 넘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 중심의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덕진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80여 명의 청년 자립을 지원해 왔으며,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실질적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단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연속 수상하

는 등 모범적인 운영 성과를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덕진지역자활센터가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로스터링 사업과 기업 연계형 근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들이 실제 사업장 경험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을 통해 3명의 청년이

인턴근로에 참여 중이며, 참여기업의 고용 연계가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취업 성과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이어지는 자활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미래센터의 발굴·상담 기능과 자활센터의 일자리·자립 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위기 청년에 대한 조기 개입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홍 덕진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위기 청년에게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제 취업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턴형 자활근로사업과 같은 현장 중심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숙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이번 협약은 전주시가 추진해 온 청년 자활 정책이 실질적인 고용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대비 화재안전 조사 전주덕진소방서가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 전반에 걸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서 관계자들이 화재안전 조사에 나서고 있다. <사진=전주덕진소방서 제공>

자발적 독서공동체 형성 탄력

전주시 송천도서관,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공모 선정

전주시 송천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도서관 문화재단이 주관한 '2026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문화예술 동아리를 구성하고 활동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송천도서관은 올해 독서동아리 '책이수다'에 경비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당 독서동아리는 오는 3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북의 대표 문학 자선인 대

하소설 '혼불'을 주제로 독서토론과 작품의 배경지를 직접 답사하는 문화기행,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 등 총 9회에 걸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영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관을 매개로 지역주민들이 즐거운 독서문화 활동을 펼치며, 새로운 도전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동아리 활동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서관에서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전통시장·상점가 경영 실태 파악 나선다

5월 11~29일 통계조사 실시

전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주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장경기를 파악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전주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작성을 승인받은 통계(승인번호: 제711006호)로, 전통시장의 판매·고용 동향 및 경기 흐름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방식은 시가 채용한 전문 조사원 14명이 대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대상은 전주지역 전통시장 6곳과 상점가 7곳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최근 공식 출범한 '가구거리상점가'가 조사 범위에 신규 포함돼 더욱 폭넓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게 됐다.

조사 내용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사업체명·산업 분류 등 일반사항 △대표 품목·영업실적·고객 수·종사자 수·결제유형 비율·운영 애로사항 등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시는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 및 분석

해 오는 8월 말 최종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은 "모든 조사원은 정주시 발급 조사원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신분 확인 후 조사에 응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정확한 통계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 사업체의 개인 정보 및 경영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보호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이동노동자 직무교육 실시

전주시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에서 전주지역 이동노동자들의 안전 일터 조성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이동노동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등 실생활에 필요한 세금 지식 제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리기사와 퀵·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전주세무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강사가 각각 참여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 예방 안전 교육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등 '세금 신고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날 교육을 이수한 전원에게 야간직업 시 안전을 지켜줄 '여름철 야방 물조끼' (한문철 교통안전 기부 물품)를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교육을 이수한 이동노동자들은 이동노동자 지원사업과 연계해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대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이동노동자

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세금 신고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동노동자는 근무 특성상 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세금 신고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이동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접수

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3만 665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산정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전주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1.13%)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1.68% 소폭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완산구가 1.39%, 덕진구가 2.02%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가 전체의 8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3억 초과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주택이다. 최고가는 중남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으로 19억620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상승한 금액이다. 해당 주택은 한옥마을 중심 지역에 위치해 표준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전주시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등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한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도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의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전주시 제공>